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www.newcapital.go.kr	보도자료 2004년 5월 21일 (금) 15 : 00 이후 보도	부 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입지환경국	
		담 당	국 장	신 원 우
			과 장	윤 용 문
		TEL	02) 3703-3584~5	
	총 3 매 (별첨제외)	FAX	02) 3703-3491	

신 행정수도 입지선정 추진일정

□ 신행정수도 입지는 국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연구단이 2003.5~12월간 마련한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상반기중 후보지 선정과 비교·평가를 거쳐 하반기중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됨

□ 입지선정기준에 대해서는

- 그동안 중간연구성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공청회, 충청권 3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 기본 내용은 지난해 11.6 제2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한 시안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음

※ 추진경위

- '03. 5. 15 입지선정기준연구 착수(국토연구원 등 7개 전문연구기관 합동)
- '03. 10. 21 입지선정기준연구 중간성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개최
- '03. 11. 6 제2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입지선정기준(시안) 발표
- '03. 11~12 전국 7개 주요도시 순회공청회 개최
- '03. 12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정부에 최종 연구결과를 제출
- '04. 1~2 입지선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정부방침 마련

□ 입지선정기준은 후보지 선정기준과 후보지 평가기준으로 구성되는데

○ 후보지 선정기준으로는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3개 항목이 채택되었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음 지역은 추가 제외키로 하였음

- 기존 시가지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이내 지역
- 주요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

○ 후보지 평가기준으로는 국가균형발전효과,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 등 5개 기본평가항목을 세분화한 20개 세부평가항목을 채택하였음

○ 아울러 기본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였음
(결과 : 별첨)

- 기본평가항목 : 2회의 국민설문조사(1차 : '03.10.29~30, 2차 : '03.12.20~21) 결과를 평균

※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거주지별 인구비례로 무작위 표본 추출한 2,000명에게 설문(신뢰도 95±2.19%)

- 세부평가항목 : 전문가 설문조사('03.12.22~'04.1.15)의 결과를 반영

※ 국토·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제 등 기본평가항목 분야별 전문가 (5개 분야 258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입지는 금년 4.17일 시행되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의 책임하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연내 확정될 예정임

① 추진위원회는 6월중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평가작업에 들어갈 것임

※ 평가위원회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 받은 국토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5개 기본평가항목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들은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내외의 기간동안 합숙하면서 평가를 실시

② 7월중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③ 추진위원회는 평가 결과 및 국민여론을 토대로 하반기중 최종입지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승인을 얻어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

<별첨 1> 평가기준

<별첨 2> 문답자료

<별첨 1>

평 가 기 준

(단위 : %)

기본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 목	가중치	항 목	가중치
국가균형발전효과	35.95	1-1 인구분산효과	9.83
		1-2 국민통합효과	7.05
		1-3 경제·산업분산효과	6.74
		1-4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 효과	6.18
		1-5 수도권 연담화 방지효과	6.15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24.01	2-1 도로 접근성	11.08
		2-2 철도 접근성	8.05
		2-3 공항 접근성	4.88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19.84	3-1 생태계 보전	9.25
		3-2 수질 영향	5.74
		3-3 대기질 영향	4.85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10.20	4-1 지형의 안전성	2.82
		4-2 도시유지관리의 효율성	2.56
		4-3 자연환경의 양호성	2.20
		4-4 경관	1.50
		4-5 배산임수	1.12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10.00	5-1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	2.86
		5-2 사업추진의 용이성	2.74
		5-3 토지매입비용	2.64
		5-4 기개발지	1.76

입지선정기준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나?

- ☐ 지난 해 5월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7개 전문 연구기관들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기준연구에 착수하여 제27회 국정과제회의(11.6)에서 시안을 발표
 - 시안마련을 위해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 11~12월 시안에 대한 전국 주요도시 순회공청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 ☐ 정부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금년 1~2월에 충청권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입지선정기준안을 마련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 ☐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측면의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수도의 입지와 도시개발 대상지로 부적합한 지역은 제외
 - 국토중심에서 원거리 지역과 서울의 통근·통학권(합목적성)
 -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 기존 시가지에서 일정거리 이내, 해안선 및 중요 군사 시설에서 일정거리 이내(개발가능성)
 - 생태·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보전필요성)

평가항목은 어떻게 설정하였나?

- 후보지 평가항목은 평가항목 설정방향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공개세미나 등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설정
 - 기본평가항목은 일반국민 설문조사('03.10.8~9)결과를 토대로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도의 기본요건 5개 항목으로 구성
 - 세부평가항목은 전문가 설문조사('03.10.7~31)결과를 토대로 기본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부요건 20개 항목으로 구성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어떻게 설정하였나?

- 자문위원회, 공개세미나 등에서 기본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일반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세부평가항목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에 따라 가중치 설정방법에 대하여 충청권 3개 시·도와 합의한 후 국민/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 기본평가항목은 국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세부평가항목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중치를 설정
 - 국민설문조사는 입지선정기준(시안) 발표를 전후하여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 실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간 실시

후보지 선정기준과 평가항목 및 가중치가 확정되면 사실상 최종입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확정·발표한 기준만으로 최종입지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
 - 평가지원단이 후보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후보지(안)으로 도출한 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후보지로 선정하고,
 -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는 16개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각 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교·평가
 - 평가결과가 나오면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입지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

후보지 선정 및 평가절차는?

- 후보지 선정절차
 -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5월중에 후보지(안)을 도출하고 평가자료 D/B를 구축하면
 - 6월 중순까지 추진위원회가 심의하여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공개
- 후보지 평가절차
 - 6월 중순에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6월 하순에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합숙하면서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7월초에 평가지원단이 평가결과를 종합정리

최종입지는 언제 확정되나?

- ☐ 금년 7월에 후보지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후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 ☐ 추진위원회에서는 하반기중 평가결과와 국민여론을 토대로 최종 입지안을 마련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2004. 5. 21

신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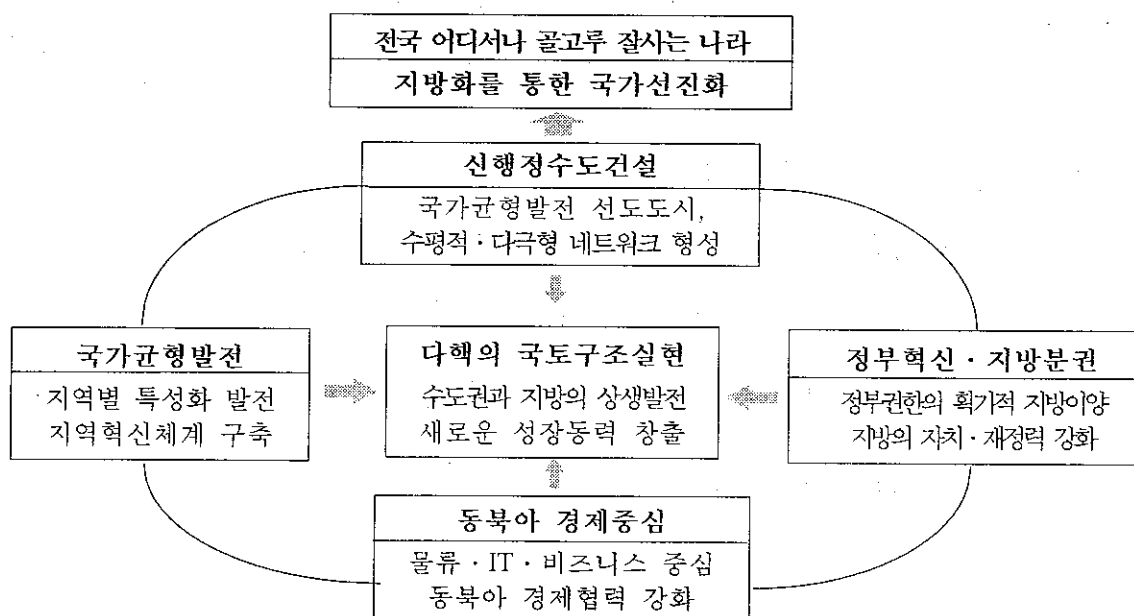
【목 차】

I. 추진배경.....	1
II. '03년 추진실적.....	2
III. '04년 추진현황 및 계획.....	3
1. 추진체계의 정비.....	3
2.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제정.....	4
3.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수립.....	5
4.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6
5. 후보지 선정·평가 및 입지 확정.....	7
6. 도시개념 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	9
7.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10
<첨부> '04년 추진과제 및 일정.....	11
추진위원회 조직도 및 추진단 현원표.....	12

I

추진배경

- 21세기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의 시대로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가운영 구조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
 - 수도권 집중과 과밀로 인하여 지방이 낙후되고 지역 격차와 갈등이 심화
 -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발전 저해
 -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기업활동 등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저하
- ⇒ 신행정수도 건설을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 · 동북아 경제 중심**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21세기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



Ⅱ

'03년 추진실적

- 신행정수도는 참여정부 임기 중인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12년 이후 단계적 이전을 목표로 추진

※ 추진일정

단 계	주요 사업
준비 단계 (~'03년 말)	·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선정 · 평가기준 마련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계획 단계 (~'07년 상반기)	· '04년 상반기 후보지 선정 및 비교·평가, 하반기 입지 확정 · 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매입 착수
건설 단계 (~'11년 말)	· 부지조성, 공공청사 건축, 기반시설 건설 · 『신행정수도지위등에관한법률』 제정
이전 단계 ('12년 이후)	· 주요 국가기관의 단계적 이전 · 주민 입주 개시

- 지난 해에는 준비단계로서 금년에 추진할 입지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수행

○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 기획단 · 지원단 · 자문위 등 「추진체계」 정비
- 신행정수도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입지선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 신행정수도의 밑그림이 될 「도시기본구상」 마련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기준」 마련
- 후보지 선정 ·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 지역 · 연령 · 직업별로 차별화된 홍보메시지를 방송 · 신문, 홍보책자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III

'04년 추진현황 및 계획

◇ 금년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계획단계」의 첫 해

- 이전대상기관의 확정, 건설기본계획 수립, 도시개념설계를 위한 국제현상 공모 등 신행정수도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 추진
- 특히, 최적의 입지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일이 핵심 과제

◇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극적인 일부계층, 지역주민 등을 포용하기 위한 홍보

1. 추진체계의 정비

(1) 추진위원회

□ 관계부처 장관·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 위 원
 - 당연직 위원(12인) : 관계부처 장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 위촉직 위원(16인) :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 대통령이 위촉

(2) 자문위원회

□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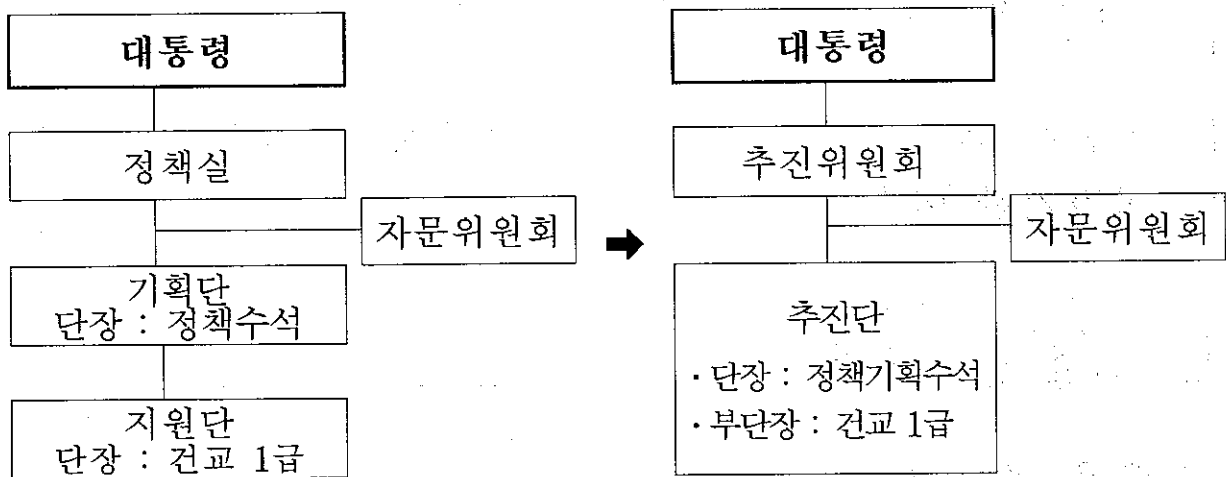
- 기존 자문위원의 활동실적·업무기여도에 대한 평가, 새로운 자문수요 등을 감안하여 재구성

(3) 추진단

□ 특별조치법 제정과 새로운 업무수요에 맞추어 기존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을 추진단으로 개편

-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조직 확대, 추진위 및 추진단이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독립함에 따른 예산·회계·인사기능 등 보강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구 변경》



2.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제정

(1) 특별조치법 시행령

□ 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04.4.17 시행)

(2)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규정

□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

3.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수립

□ 신행정수도에 수용하게 될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 앞으로 추진할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 개념설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 향후 청사 배치형태 결정 등 건축계획 수립에 활용

□ 추진단, 행정·입법·사법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T/F팀」을 구성('04.3)

○ 이전 대상기관의 범위, 이전방법 및 시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 중

□ 주요 국가기관중 이전대상기관 선정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검토대상 131개 단위행정기관중 74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잠정 선정하였고, 공청회(6.9)를 거쳐 상반기중 확정

※ 대전청사,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기술표준원(산자부 소속기관) 등 이전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5개 기관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조정 완료

○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국회 동의를 필요하므로 금년 하반기중 확정

※ 헌법기관의 이전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전을 전제로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 추진

4.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

○ 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신행정수도의 도시 규모·형태, 이미지, 입지선정기준
- 도시개발방향, 재원조달, 사업시행방안 등

○ 향후 추진될 국제현상공모와 개발계획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등 지침적인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

□ 건설기본계획에 도시계획,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므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운영 중

○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사업시행, 방호, 문화 등 7개 분야의 중견 전문가로 T/F를 구성('04.4)

○ 4월 중순부터 도시개발 기본방향, 사업시행방안 등 건설기본계획(안)을 작성 중

□ 상반기중에 건설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 6월중에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고 6월 하순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여론을 수렴

○ 6월말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초 대통령 승인 및 고시

5. 후보지 선정·평가 및 최종입지 확정

□ 입지선정기준 마련 및 현황조사 결과 검증완료

- 연구단의 입지선정기준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정부방침을 마련('04.2)

※ 입지선정기준은 후보지 선정기준과 후보지 평가기준으로 구성

- '03.6월 이후 조사단이 시행한 충청권지역 현황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최종보고서 작성('04.3)

□ 금년 상반기중에 후보지 선정 및 후보지 비교·평가

-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충청권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안) 마련 및 평가자료 DB 구축작업 중

- 평가지원단은 후보지 비교·평가작업 지원을 위해 5개 기본평가항목 분야별로 간사역할도 수행(총괄: 국토연구원)

※ 국가균형발전효과(국토연구원), 접근성(교통개발연구원), 환경성(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조건(국토연구원), 경제성(한국개발연구원)

- 6월중 추진위원회가 후보지(안)을 심의하여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개

※ 후보지 공개시부터 최종입지가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시행

- 6월 하순에는 국토·도시계획, 환경 등 5개 기본평가항목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 간의 비교·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추천받아 추진 위원회가 인선(5개 분과위별로 16명씩 총 80명으로 구성)

※ 평가위원장은 평가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되 평가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음

- 평가는 보안유지를 위해 10일 이내의 합숙을 하면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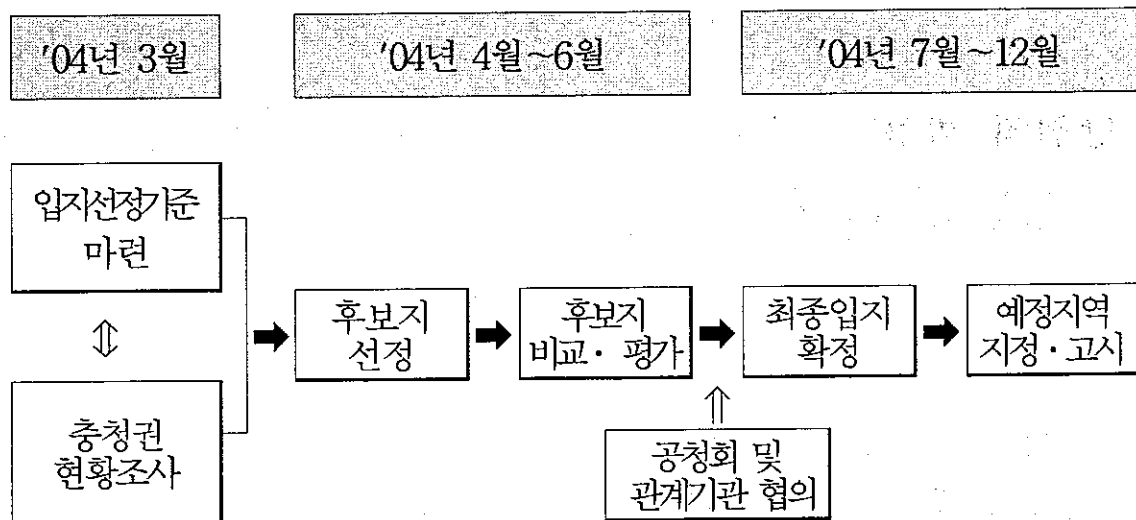
□ 8월중에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

- 7월중에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청회, 관계기관협의, 추진위 심의 등을 거쳐 8월중 최종입지를 결정

- 입지확정 직후 토지세목조사(약 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거쳐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

※ '04.1.1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기 위해 금년내 반드시 지정·고시해야 할 필요

《입지선정 추진현황 및 계획》



6. 도시개념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

- 신행정수도가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이미지, 공간구조 등 도시개념(concept) 설계를 국제현상공모 할 계획
 - 세계적 전문가들의 참여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적 홍보효과와 국민적 관심을 기대
 - 대형사업의 국제공모사례가 드물어 벤치마킹이 어려우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8월까지 사전준비를 완료할 계획
 - 국제현상공모 도시설계지침 연구용역('03.10~'04.7, 서울대) 및 관리용역('04.4~'05.3, 국토연구원)을 시행중
 - '04.3월에 국제현상공모 T/F를 구성하여 공모진행방식, 공모지침 등에 관한 쟁점사항을 정리중
 - 6월중 공모홈페이지 오픈, 공모진행을 주관할 전문위원 선정, 8월까지 UIA(국제건축가연맹)와 협의하여 심사위원 선정 및 공모지침 확정 예정
 - 입지가 선정되는 대로 9월에 현상공모를 공고하고, '05.3월에 당선작 발표
 - 공고후 9~10월중 응모자 등록 실시
 - '05.2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05.3월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
- ※ 당선작의 아이디어가 '05년부터 수립할 마스터플랜·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선자 자문 등을 통해 사후관리할 계획

7.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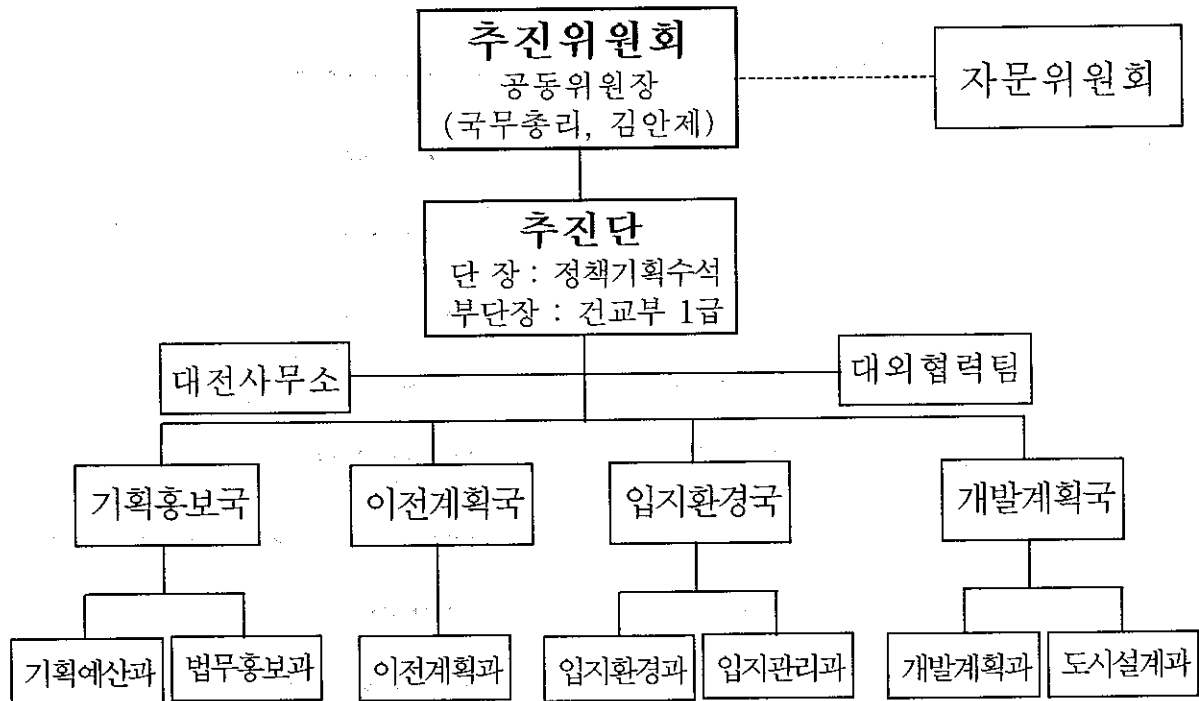
-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충청권지역간 갈등 방지를 위해 입지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적극 홍보
 - 리플렛 배포('04.6)와 신문광고 추진(입지확정 직후)
 - 후보지 및 최종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한 메뉴개발 등 홈페이지 개선·운영
-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극적인 일부 계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
 - 반상회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추진현황 홍보
 - 추진위원회 출범시기('04.5)에 맞추어 홍보책자 및 뉴스레터 배포
- 신행정수도에 대한 청년층 관심제고를 위한 이벤트 실시
 - 2차 가상도시건설(Sim-City) 경연대회 실시('04.8)
 - 신행정수도 건축공모전('04.9) 및 논문공모전('04.7~'05.1) 실시
 - 신행정수도 CI 공모('04.7) 실시
-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역사적 사료로서 『'03 신행정수도 백서』 발간('04.5)

<첨부 1> '04년 추진과제 및 일정

과제명	세부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추진체계의 정비	○추진위 구성 ○자문위 정비 ○추진단 정비	■	■		
2. 특별법 시행령 등 제정	○시행령 제정 ○추진위·추진단·자문위 규정 마련	■	■		
3. 주요국가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마련 ○국회등 헌법기관 이전계획 마련	■	■	■	■
4. 후보지 선정·평가 및 입지 확정	○현황조사 검증 ○입지선정기준 확정 ○후보지 선정 및 비교·평가 ○최종입지 확정 ○예정지역 등 지정·고시	■	■	■	■
5.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안) 마련 및 확정 ○대통령 승인 및 고시	■	■	■	
6. 도시개념 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	○도시설계지침 작성 ○공모 시행·평가	■	■	■	■
7.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홈페이지 개선 ○건축공모전, 신문광고 등 ○'03 신행정수도 백서 발간	■	■	■	■

<첨부 2> 추진위원회 조직도 및 추진단 현원표

□ 추진위원회 조직도



□ 추진단 현원표

구분	공무원								민간	계
	정무직	1급	2~3급	3~4급	4~5급	6~7급	계약직	가능직		
단장	1									1
부단장		1						1	1	3
기획 홍보국			1	2	2	1			7	13
이전 계획국			1	1	1	1			2	6
입지 환경국			1	2	1				6	10
개발 계획국			1	2	2		1		6	12
대전 사무소					3		1		1	5
대외 협력팀							1		2	3
계	1	1	4	7	9	2	3	1	25	53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

2004. 5. 21

신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목 차】

I. 신행정수도건설 필요성

1. 수도권 집중현황 및 문제점.....1
2. 건설의 필요성.....2
3. 비전과 추진전략.....3
4.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 수립경위.....4

II. 도시 기본구상

1. 이념 및 미래상.....5
2. 이전대상기관.....7
3. 도시개발 유형 및 규모.....9
4. 도시의 공간구조.....17
5.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방안.....22
6. 파급효과.....23

III. 입지선정기준

1. 기준 작성의 개요.....28
2.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31
3. 후보지 선정기준.....33
4. 후보지 평가기준.....36

I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

1. 수도권 집중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

-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7.6%, 제조업체 수의 56.7%, 예금대출의 68.3%가 집중

※ 수도권 집중도 : 일본 32.4%, 프랑스 18.2%, 대만 14.5%, 영국 12.1%

□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주택·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

※ 주택 평당분양가('03.6) : 서울 978만원, 부산 527, 대구 485, 광주 367, 대전 485

※ 도심 평균운행속도('03년) : 서울 15.5km/h, 부산 32.2, 대구 26.2, 광주 21, 대전 23.8

※ 수도권의 연평균 NO₂ 배출량이 지방보다 40% 높은 수준

□ 반면, 지방은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가용인력마저 부족하여 자립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저하

※ 국가경쟁력('04 IMD) : 한국 15위('03년 15위), 말레이시아 7위, 대만 4위, 일본 9위, 중국 10위, 태국 11위

2. 건설의 필요성

□ 수도권 집중압력의 물리적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일극중심의 왜곡된 국토공간구조를 다중심의 국토구조로 전환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 등을 분산하여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

□ 서울지향적 가치관의 타파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지역사회 구축

○ 분권·분산·분업을 토대로 서울제일주의를 극복하고
전국 각 지역주민이 자기고장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다양한 사회」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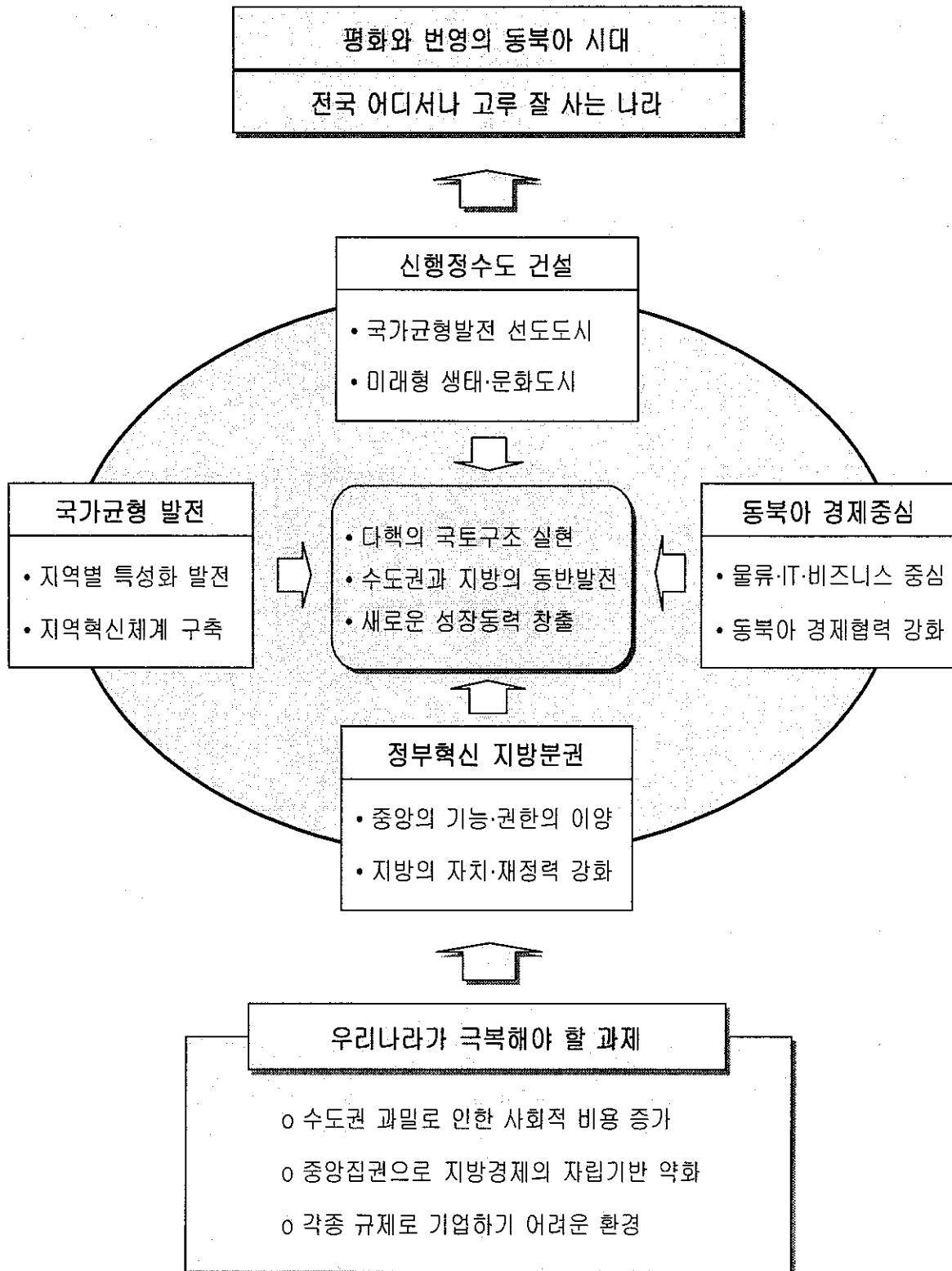
□ 지방분권·균형발전시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정운영시스템
혁신의 토대 구축

○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되고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
로서 함께 발전하는 「분권국가」로의 전환

○ 모든 지역의 개성을 살려 전국이 고르게 상생 발전하는
「분산된 분업국가」로의 전환

☞ 「지역간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 마련

3. 비전과 추진전략



4.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 수립경위

- 신행정수도의 미래상·도시규모 및 형태 등 신행정수도의 밑그림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기준을 마련
- 국토연구원 등 14개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단에서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을 연구('03.5~12)
 - 연구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보고,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 ※ 공개 세미나 : 「이전효과('03.7.9)」, 「이전대상기관의 범위('03.8.12)」
「도시규모 및 형태('03.9.24)」, 「입지선정기준('03.10.21)」
- 제27회 국정과제회의('03.11.6)에서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시안)을 발표
 - (시안)에 대해 서울·대전 등 7대도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 ※ 대전('03.11.27), 전주('03.12.9), 춘천('03.12.10), 대구('03.12.16),
부산·광주('03.12.17), 서울('03.12.19)
- (시안)에 대해 충청권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04.1.15~2.15)를 거쳐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04.2)하였고 이를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04.6)

II

도시기본구상

1. 이념 및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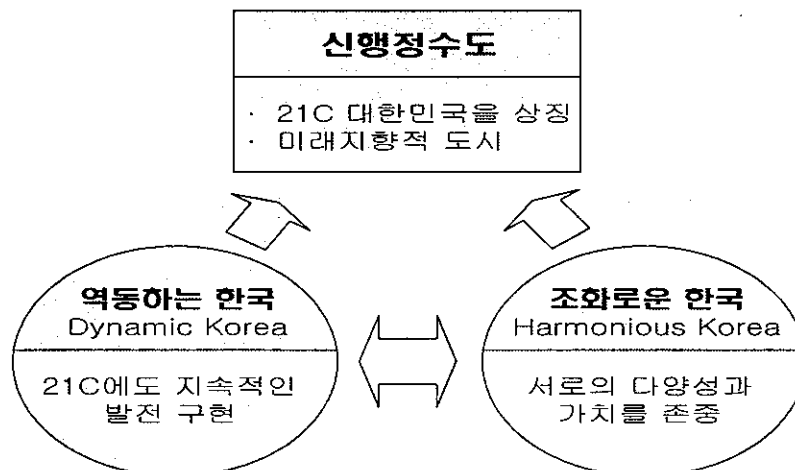
(1) 건설 이념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경제중심을 포괄하는 『상생과 도약』으로 설정

상생(相生) : 지역간·세대간·계층간 갈등이 해소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전국이 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한국’

도약(跳躍) :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고 동북아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역동하는 한국’

⇒ 「상생」과 「도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를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



(2) 신행정수도의 미래상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 국가중추관리기능을 충청권에 이전하여 서울제일주의 가치관을 타파
-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권의 네트워크를 형성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 시민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택단지 건설
-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존중도시

-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첨단교통체계를 형성
- 신행정수도의 상징성과 시민생활의 편의성이 조화된 도시개발

□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 한국적 미를 담은 건축물과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문화 공간을 조성
-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정보통신망 구축

2. 이전대상기관

(1) 이전범위 대안검토

- 행정부 단독이전,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이전,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등 3부 모두 이전 등 **3가지 대안**을 검토
- **행정부만**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입법부와의 업무연계 미흡 및 신행정수도의 상징성 저하
 -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제고되나 이전기간 및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
 - **행정 · 입법 · 사법부 등 3부 모두** 이전하는 경우 수도로서의 기능이 갖추어지나 수도권 주민의 반발 예상
- ※ 외국의 수도이전의 경우 대부분 3부 모두를 이전

《 국가중추기능 이전범위 대안 검토 》

대 안	장 점	단 점
행정부 단독	· 이전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	· 수도권 분산 효과 미약 · 입법부와의 업무연계 미흡
행정부 + 입법부	· 수도권 분산효과 제고 · 행정부 · 입법부간 업무연계 및 상호 견제 충실	· 이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 · 국회도서관 이전은 수도권 학술연구의 중요 인프라 상실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결	· 이전기간 장기화 및 비용 과다 · 수도권 주민의 반발 예상

(2) 이전대상기관

□ 수도권 분산효과 극대화 및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를 고려하여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3부 모두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원칙적으로 행정부와 함께 이전이 바람직하나
- 3권분립 원칙을 존중하여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을 거쳐 이전여부를 결정

□ 행정부

-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종사자 18천여명 추정)

《 제 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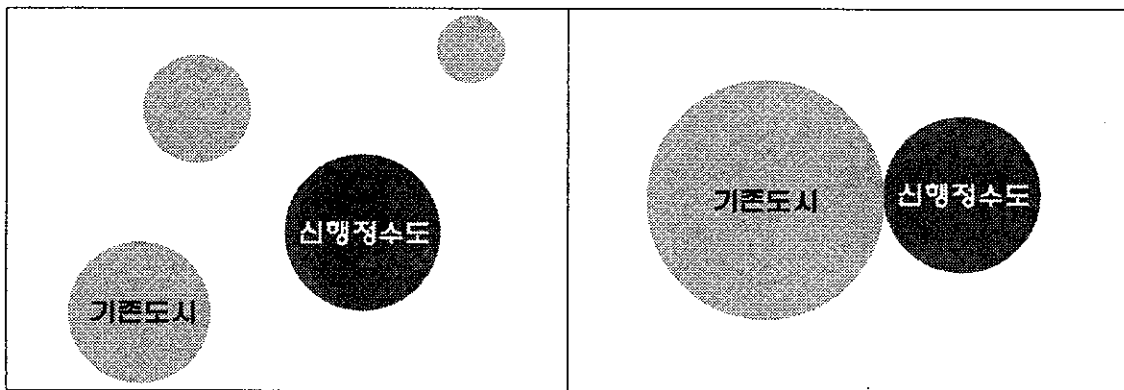
-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관세청, 조달청 등)
- 업무 특성상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비용이 현저히 큰 중앙행정기관(해양경찰청, 기상청, 농진청)
-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입지할 필요성이 낮은 소속기관(감사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 지역단위 또는 특정시설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국립현충원 등)

※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전부 이전을 전제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안)을 마련

3. 도시개발 유형 및 규모

(1) 도시개발 유형

- 기존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독자적 성격의 도시로 개발하는 「신도시형」과 기존 도시내 또는 인근에 기존 시가지를 확장하는 「신시가지형」으로 개발 가능



《 신도시형 》

《 신시가지형 》

○ 신도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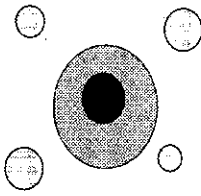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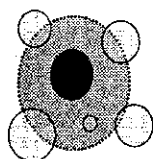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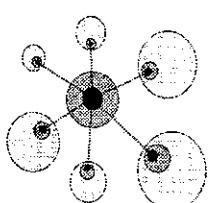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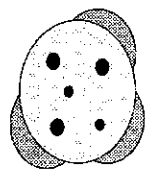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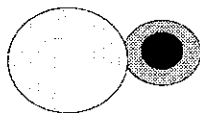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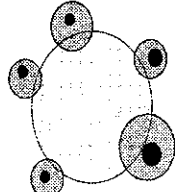
- 기존도시와 연담화될 우려가 적고 신행정수도의 상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
- 대규모 토지매입, 광역기반시설 구축 등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

○ 신시가지형

- 기존도시의 기반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개발규모가 적고 단기간내 개발이 가능
-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에 과중한 부담을 주며 기존도시의 과밀을 유발할 우려

□ 「신도시형」과 「신시가지형」은 정부청사를 한곳에 집중시키거나 또는 여러곳에 분산하는 방식에 따라 세분가능

《 신도시형 · 신시가지형 개발의 세부유형 》

유 형	개념도	장 단 점
신 도 시 형	원거리 독립형 	-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 확보와 이미지 조성을 극대화 - 대규모 도시개발로 수도권 인구 유치 효과 극대화
	시가지 흡수형 	- 입지 선정 용이 - 기존시가지로부터 개발초기의 노동력, 서비스기능 확보 용이
	원거리 분산형 	- 소규모 신도시형태로 행정수도 개발이 가능 - 행정기관 분산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을 고루 만족
신 시 가 지 형	일체형 	- 개발규모 및 비용 최소화 - 기존 도시의 시가지정비에 기여
	연계 확장형 	- 소규모 신도시로 환경조성이 가능 - 기존 기반시설 이용으로 개발비용 저렴
	외곽 분산형 	- 도시 외곽의 개발가능 토지에 입지 가능 - 행정기능 수행의 비효율성 초래

- 도시개발유형을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지역간 유치경쟁 완화, 상징성과 이미지, 환경의 질, 기능수행의 효율성, 적지확보 용이성, 개발비용 절감 등 7개 관점에서 평가

《 도시개발 유형에 따른 평가결과 》

유형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지역간 유치경쟁 완화	상징성 과 이미지	환경의 질	기능 수행 효율성	적지 확보 용이성	개발 비용 절감	계
신 시 가 지	일체형	6	6	5	6	4	6	1	34
	연계 확장형	3	5	4	4	3	2	2	23
	외곽 분산형	5	4	6	5	5	4	3	32
신 도 시	원거리 독립형	1	2	1	1	1	5	5	16
	시가지 흡수형	2	3	2	2	2	3	6	20
	원거리 분산형	4	1	3	3	6	1	4	22

※ 1~6 숫자는 6개 대안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순위를 의미

- 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신도시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에서 원거리 독립형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평가

《 외국의 신수도 개발유형 》

국 가	신수도	유 형	수위도시와의 거리
호 주	캔 버 라	신도시	시드니에서 300km
캐 나 다	오 타 와	신도시	토론토에서 400km
브 라 질	브라질리아	신도시	상파울로에서 1,015km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신도시	카라치에서 1,000km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신시가지	쿠알라룸푸르에서 25km

(2) 도시인구 규모

□ 신행정수도의 적정 인구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구분산 효과 등 5개 기준을 적용

※ 인구규모 결정기준 :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충청권 도시체계와의 조화,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능 확보, 용수공급

□ 인구규모 30만 내지 100만명 규모중 **인구 50만명** 규모를 최적대안으로 설정

- 50만명 이상 규모는 인구분산효과는 있으나, 충청권내 도시체계, 안정적 용수공급에 문제점 야기
- 50만명 이하 규모는 충청권 기존 도시체계와는 조화되나, 인구분산효과 및 자족기능확보 측면에서 미흡

《 인구규모 결정기준별 적정 인구규모 》

<u>결정기준</u>	<u>적정규모</u>
○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 50만인 이상
○ 이전인구 수용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2.5만명)시 충청권 인구 65만명 증가	: 50만인 이상
○ 자족기능 확보 ※ 분당 규모(40만) 이상 커야 최소 자족기능 가능	: 50만인 이상
○ 충청권내 도시체계와 조화 ※ 대전 142만, 청주 60만, 천안 45만	: 30~50만인
○ 용수확보	: 100만 이하

(3) 도시기능 및 개발면적

□ 도시기능

- 신행정수도에 정치·행정 등 국가중추 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여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촉진
-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장 등 국제교류기능을 유치
- 신행정수도의 도시자족기능을 위한 오페라,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예술공간과 대학을 포함한 문화, 교육기능을 유치

□ 주거지 인구밀도

- 인구밀도는 인구규모와 함께 신행정수도 개발면적을 결정하고 도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저밀도 개발이 바람직한 반면
- 토지이용의 효율성, 개발의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고밀도 개발이 유리

- 도시환경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인구밀도는 도시개발 전체에 대한 총밀도 보다는 주거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순밀도를 기준으로 토지소요면적 등을 추정
- 주거용지 순밀도의 적정 범위를 250~400인/ha로 설정하고, 4개 대안별로 검토

《 인구밀도 대안별 장단점 비교 》

밀도대안 (인/ha)	장단점	주거용지 평균용적률	아파트용지 평균용적률	평가
250	- 선진국형 밀도 수준의 도시 건설이 가능 - 대규모 토지소요로 비용증가 및 입지선택의 제약	75%	90%	4
300	- 선진국형과 우리 현실의 절충형	90%	120%	1
350	- 현실적 대안이나 환경의 질 제고에는 미흡	105%	150%	2
400	- 행정수도로서 기대수준에는 미흡	120%	180%	3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신도시를 저밀도로 개발하고 있으나, 가용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중저밀도 수준으로 개발
-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주거의 쾌적성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주거지 인구밀도는 300~350인/ha 수준이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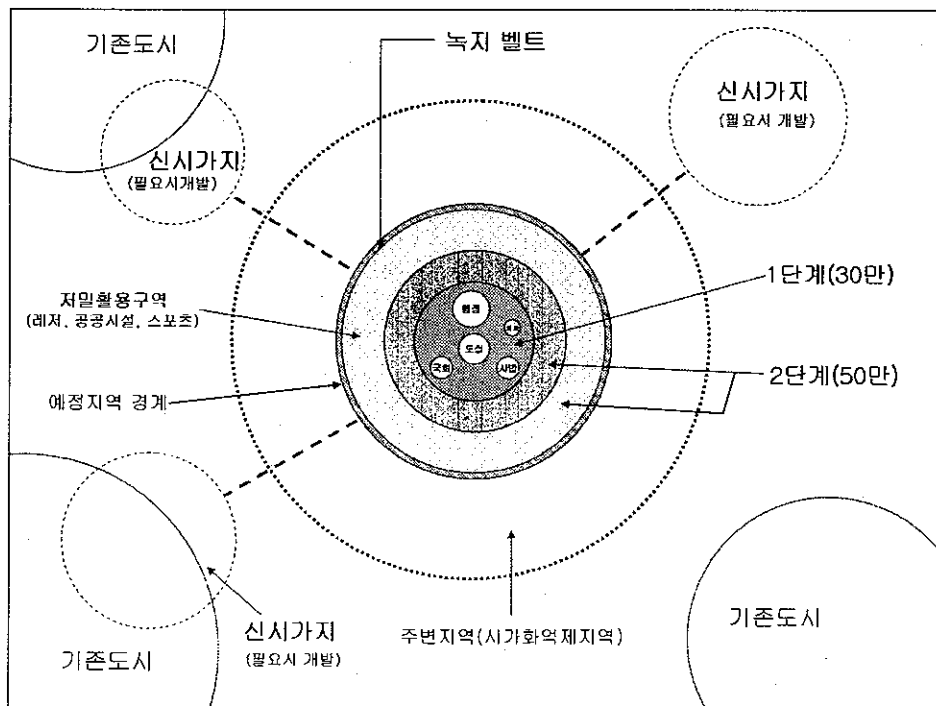
※ 분당(614.8인/ha), 판교(347인/ha), 다마(357인/ha)

□ 도시개발 면적

- 인구 50만명과 주거지 인구밀도 300~350인/ha을 고려할 경우 신행정수도 개발에 **2,300만평** 내외의 토지가 소요

(4) 단계적 개발 추진

- 도시의 성숙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행정수도에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
 - 초기에는 이전기관 및 지원기능 종사자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므로 **2020년까지 30만명** 규모로 개발(1단계)
 - 인구가 추가 유입되고 자족성이 증대되는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도시 건설(2단계)
- 신행정수도의 계획적인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억제
 - 추가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도시 및 읍·면을 정비하여 개발수요를 흡수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지역의 동반발전을 도모



《 신행정수도 및 주변지역 개발모형도 》

(5) 충청권 기존도시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도시간의 기능분담을 추진

○ 대전(첨단과학기술), 청주(바이오산업), 천안(반도체) 등 기존 도시들의 특화기능은 지역혁신체계(RIS)를 통하여 보다 강화

○ 신행정수도에는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기능을 유치

-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one-stop 행정서비스 등

□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충청권에 65만명 내외의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므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방안을 마련

○ 신행정수도를 인구 50만명 규모로 건설하고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통하여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흡수

-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되면 주변의 중소도시와 읍·면급 시가지를 포함하여 광역차원의 도시성장관리 및 취락정비 방안의 마련에 착수

□ 신행정수도와 대전·청주·천안간의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350만명 규모의 지역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도록 도(道) 종합계획을 제수립할 필요

4. 도시의 공간구조

(1) 정부청사 배치

□ 도시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배치와 관련하여 집중형, 분산형, 클러스터형 등 3개 대안이 검토가능

○ 집중형은 모든 행정기관을 한곳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행정기능의 효율적 수행 및 보안에 유리하나, 인근지역과 격리되고 야간에 활력없는 거리를 초래할 우려

○ 분산형은 모든 행정기관을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방식으로 개성있는 청사건축이 가능하나,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청사건축 비용상승 및 보안유지에 어려움

○ 클러스터형은 유사기능의 행정기관별로 집단화하여 분산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주변지역과 조화된 토지이용을 통해 주야간 활력있는 거리 조성 가능

□ 청사주변 활력유지, 업무수행의 효율성, 청사보안 등을 고려하되, 국제공모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를 기초로 청사 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 시민친화적이면서 개성있는 정부청사 건축

- 현재의 과천, 대전청사와 같이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권위주의적인 청사에서 탈피하여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부청사로 건축
 -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청사를 입지
 - 청사광장 등 옥외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 미국 연방수도계획위원회는 수도정비계획에서 시민친화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청사 1층을 식당, 기념품점 등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
- 획일적인 디자인의 건물로 구성된 종합청사 형태를 지양하고 개성있는 청사를 건축
 - 각 부처의 청사가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편리성·기능성과 건축미를 함께 갖추도록 설계
 - ※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는 부처별로 청사를 개성있게 설계하면서도 부처 기능별로 집단화
- 정부청사 등 주요 공공건물의 방호시설이 도시미관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도록 가로수, 화단, 도로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방호와 도시미관 증진을 함께 도모
 - ※ 미국 연방수도계획위원회는 9.11 테러 이후 설치한 과도한 방호시설이 시민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계획을 마련('02.10)

(2) 주거지역

□ 쾌적하고 개성있는 주거환경 조성

- 국내 최저수준인 300~350인/ha의 전원적인 주택단지를 조성
- 주변 자연경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배치
- 획일적인 박스형 아파트에서 벗어나 단지별로 건축물 형태가 차별화되도록 도시설계에 반영

□ 근린생활권별로 주민들의 '우리동네'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개념을 도입

- 공공시설·생활편익시설을 근린상업지구와 함께 배치하고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주민간의 접촉을 확대
- 주민들이 계획·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추후에 용도 및 건축물 형태 등을 결정하는 문화공지(空地)를 근린생활권별로 설정

(3) 공원·녹지

□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원·녹지면적을 기존 신도시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보

- 도시내외의 생태계가 연결되도록 켜기형 녹지체계를 형성
 - 도시외곽의 녹지벨트와 공원 및 녹지는 기존의 수림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계획
- 하천, 인공호수 등 수변공간을 문화예술 공연장이나 시민들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

(4) 교통·정보통신

□ 광역교통체계

-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간선교통망체계를 구축
 - 신행정수도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교통망을 확충
 -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를 직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
 - 신행정수도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고속철도 역사를 설치하고 기간철도망과 연결되는 철도도 건설
 - 도심통과 교통량의 우회 및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시 신행정수도 외곽에 순환고속도로를 건설
-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를 건설하고, 청주공항과의 직결노선을 개설
 - 청주공항의 국제 및 국내 항공노선도 확대 검토

□ 도시교통체계

○ 대중교통위주로 도시교통체계를 형성

- 급행버스시스템(BRT) 등 수송효율이 높은 첨단 대중교통수단을 운영
- 대중교통수단으로 짧은 시간내 도심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시외곽에 모든 교통수단간의 환승이 가능한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 인간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 자전거와 도보로 도시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녹지체계와 연계한 자전거·보행자 도로망을 구축
- 저상버스 도입 등 노약자, 장애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설치

□ 첨단정보통신체계

○ 신행정수도는 국내외 어느 곳과도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정보도시로 건설

○ 이를 위하여 차세대 고도정보통신체계인 광대역 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을 설치

- 전자정부시스템과 함께 국민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G4C(Government for Citizen)의 기반을 마련
- GIS와 ITS를 바탕으로 도시정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도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5.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1) 건설비용 추정

□ 신행정수도 건설에 2030년까지 **45.6조원**이 소요될 전망

-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3조원** 투입
- **민간**은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3조원**을 투입

(2) 재원조달방안

□ 건설비용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30년까지 분산투자

- 정부청사의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이전에 총사업비의 56.3%를 집중 투입
-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 기간중에도 재정소요가 연평균 1.1조원 수준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전망

※ 1.1조원은 2002년 전국 도로투자비(16.5조원)의 6.6%에 해당

○ 재원조달 방안

-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행정수도특별회계’ 설치
- 이전적지 활용계획에 의한 일부 정부청사 매각대금 활용
- 광역교통시설 등 SOC시설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와의 환지방식 등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6. 파급효과

(1) 국토공간부문

□ 수도권 인구분산

-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하는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3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1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충청권인구 증가분의 4/5는 수도권에서, 나머지 1/5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인구증감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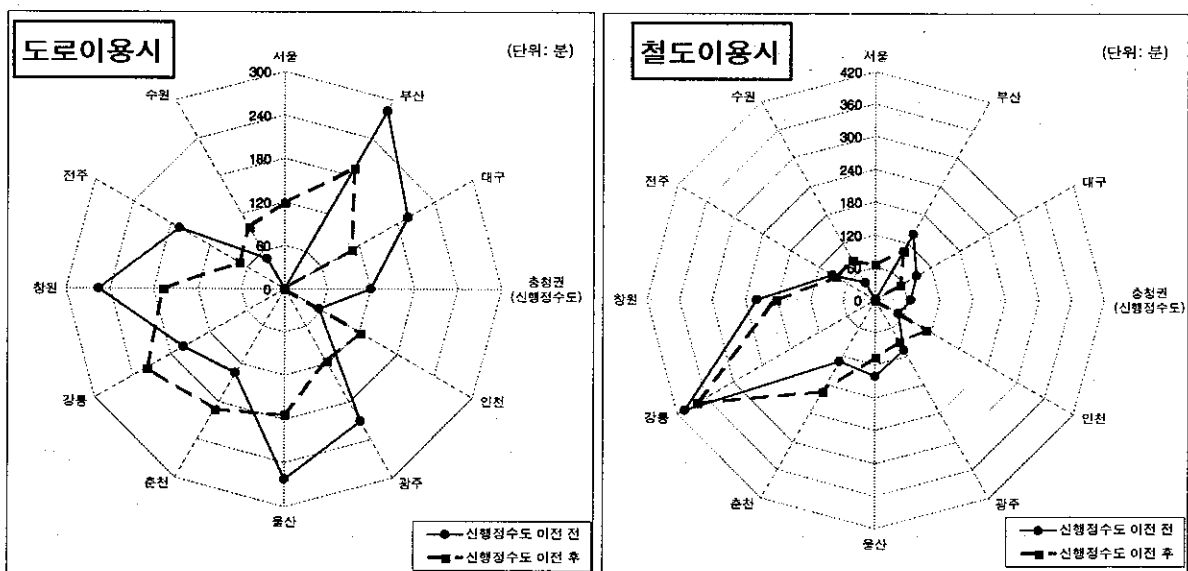
연 도	수도권 인구 감소	충청권 인구 증가
~2015	▽236,575	297,125
~2020	▽301,412	381,270
~2025	▽396,237	502,591
~2030	▽513,245	651,552

-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
- 영남권의 인구는 72만명이 증가하고 호남권은 34만명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수도권 인구분산이 가능

□ 전국에서의 교통접근성 개선

○ 신행정수도~전국 주요도시간이 서울~전국 주요도시간 보다 통행시간·거리가 상당수준 감소

- 도로이용시 통행시간 16.6% 감소, 통행거리 17.9% 감소
- 철도이용시 통행시간 1.4% 감소, 통행거리 8.9% 감소



《 신행정수도이전 전후의 교통수단별 통행시간 비교 》

□ 권역간 통행량 변화

○ 수도권 인구분산에 따라 수도권 내부 및 수도권 ~ 비충청권과의 통행량은 감소

- 수도권 내부 통행량 4.2% 감소, 수도권과 비충청권과의 통행량 3.8% 감소

○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충청권 내부 통행량은 30.3% 증가하고 충청권과 비충청권과의 통행량은 12.0% 증가

《 권역간 통행량 변화(단위: 천 통행/일, %) 》

구 분	수도권 내부	수도권↔ 충청권	충청권 ↔비충청권	수도권↔ 비충청권	충청권 내부
미 이 전	23,343	1,370	910	2,736	2,884
이 전	22,366	1,543	1,109	2,631	3,758
증 감	▽977	173	109	▽105	874
증 감 율	▽4.2	12.6	12.0	▽3.8	30.3

□ 교통비용 절감효과

○ 전국적으로 연간 1.1조원의 교통비용이 절감(170→168.9조원)

- 수도권은 2.8조원, 비충청권은 0.7조원 각각 감소,
충청권은 2.4조원 증가

《 교통비용 절감효과(단위: 억원/년) 》

구분		통행시간비 용	운행비용	사고비용	물류비용	합계
절감액	수도권	▽20,352	▽6,249	▽1,383	▽83	▽28,067
	충청권	17,334	5,388	1,243	▽47	23,918
	비충청권	▽4,851	▽1,440	▽477	▽130	▽6,898
	전국	▽7,869	▽2,301	▽617	▽260	▽11,047

(2) 수도권 환경부문

□ 폐기물, 대기오염, 하수도 유입감소 등 수도권 환경오염이 2.2%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절감

《 수도권 환경오염 저감 효과(단위 : 톤/일) 》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상수도	하수유입량
1일발생량	26,541	1670.24	9,152,000	11,897,600
1일감소량	▽580	▽36.5	▽200,000	▽260,000

(3) 국민경제부문

□ 거시경제 효과

- GDP는 투자소요가 많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최대 0.41% 증가하나 이후 점차 축소될 전망
- 물가는 건설기간 중 최대 0.46% 상승하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준은 아님
- 건설산업 고용은 2030년까지 연인원 36.9만명의 신규 창출이 예상(2007~2011년 기간중 10.0만명 증가)

□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지가는 1.5%, 주택 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 지가 및 주택가격 변화(%) 》

구 분	토지가격	주택가격
수도권	▽1.5	▽1.0
서울	▽2.4	▽1.6
경기	▽0.8	▽0.6
인천	▽0.3	▽0.2

(4) 사회부문

□ '서울제일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이 크게 완화

- 종래 서울이 독점하던 정보생산, 정책결정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담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협력과 보완 구조로 전환
-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급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 '서울지향'의 근본원인이 해소

□ 지역격차 완화로 지역간 갈등 해소

-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대폭 완화
- 지방도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재인식하게 되고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짐

Ⅲ

입지 선정 기준

1. 기준 작성의 개요

(1) 작업과정

□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운영가능성,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작업과정을 구분

- 국가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입지선정 원칙의 일반성을 찾기 어렵고, 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

※ 우리나라의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78년)의 경우 4단계로, 일본 및 브라질의 경우는 3단계로 입지를 선정

《 입지선정기준 작성의 국내외 사례 》

구 분	백지계획(국내)	일본	브라질
단계구분	4단계	3단계	3단계
입지선정 단계	1. 입지범역 설정 2. 후보지 선정 3. 후보지 1차평가 4. 후보지 2차평가	1. 전국을 검토하여 16개 대상지역 선정 2. 3개 후보지 선정 3. 최종후보지 선정	1. 중앙고원지대 선정 2. 입지기준에 따라 5개 후보지 선정 3. 최종후보지 결정
특 징	안보상의 이유로 충청권 이전계획	동경과 일정거리 이격된 지역을 전국적으로 탐색	중앙내륙지역 개발을 위해 중앙고원지대에서 적합한 입지를 탐색

○ 입지선정기준 작성의 작업과정은 입지선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3단계 과정이 보편화

- 일반적으로 입지범역 설정기준 → 후보지 선정기준 → 후보지 평가기준의 과정을 채택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입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3단계로 작업을 진행

○ 1단계 :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 검증

- 신행정수도가 어느 권역에 입지하여야 하는가를 검토

○ 2단계 : 후보지 선정기준 마련

- 충청권내에서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

○ 3단계 : 후보지 평가기준 마련

- 최적입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복수의 후보지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

《입지선정기준 작성과정》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지역	전국	충청권	후보지군
작업방향	신행정수도는 어느 권역에 입지해야 하는가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후보지는 어디인가
결 과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 검증	후보지 선정기준	후보지 평가기준

(2) 수도입지의 기본원리

□ 상징성 및 통합성

- 수도의 1차 기능인 통치기능을 가지면서도 국민의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일체감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

□ 중심성

- 수도는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가 필요

□ 기능성

- 국가중추관리기관이 입지하는 정치·행정의 수위도시로서 국가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여야 함
- 국토 어디에서라도 오고 가기 쉬워야 하며, 외국과의 연결도 편리해야 함

□ 환경성 및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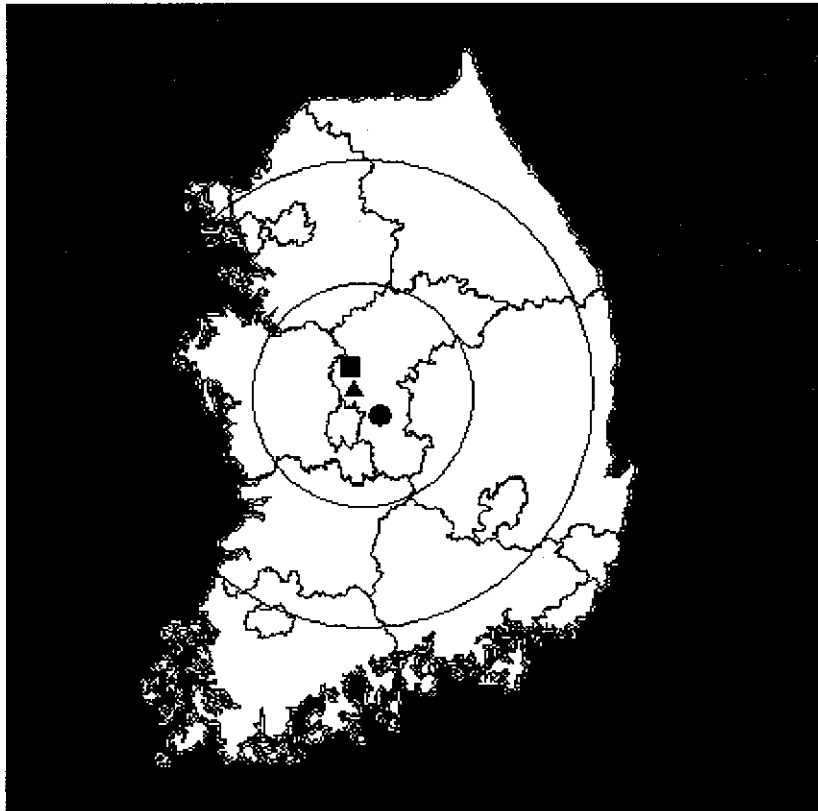
-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적어야 하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함
- 쾌적한 환경도시, 자연친화적 도시조성이 가능해야 함

2.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

□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좋은 권역

○ 국토의 면적중심점, 인구중심점, 산업중심점이 모두 충청권에 위치

- 면적중심점(●) : 충북 옥천군 청성면
- 인구중심점(▲) : 충북 청원군 가덕면
- 산업중심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 우리나라 중심점 》

- 충청권은 전국 시도로부터의 통행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

《 전국 도간 총통행시간 》

구 분	1996년 현재		2010년 계획고속도로 개통시	
	시간(만분/일)	순위	시간(만분/일)	순위
경기	2,337	5	2,178	5
강원	2,082	4	1,942	4
충북	1,093	1	1,002	1
충남	1,488	2	1,399	2
전북	1,584	3	1,485	3
전남	2,779	8	2,379	6
경북	2,717	7	2,595	8
경남	2,644	6	2,391	7

자료 : 원광희(2003),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변화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6집 제1호

□ 충청권은 지정학적으로도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발전잠재력의 지방확산이 용이
- 지역간 상생발전에 의한 국민통합에 기여

⇒ 따라서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건설목표인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유리

※ 국민여론조사 결과

-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입지에 57% 찬성('02.12, 중앙일보)
-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입지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데 61% 동의('03.10,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3. 후보지 선정기준

□ 대안검토

- 후보지 선정절차상 모든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기준과 두 단계 나누어 적용하는 기준의 두 가지 대안을 비교·검토

- (제1안) 신행정수도 건설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미리 제외하는 기준
- (제2안) 충청권 전역을 후보지 선정대상으로 적용하는 기준

《 기준마련 대안 비교 》

구 분	제1안	제2안
기준마련 방향	신행정수도 건설목표에 상충되는 지역을 후보지 선정대상에서 미리 제외하는 기준	충청권 전역을 후보지 선정대상으로 동등하게 적용하는 기준
장점	· 후보지선정 작업의 효율성 · 현황조사기간 절감	· 충청권 전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단점	· 특정지역 배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	· 건설목표에 상충되는 지역의 포함 가능성 · 입지선정작업의 복잡

- 후보지 도출작업과 현황조사 등 효율적인 후보지 선정작업이 가능한 제1안으로 추진

□ 적용기준

-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의 3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
 - 도시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인구 50만명의 수용이 가능한 2,300만평 내외의 후보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① 합목적성

- 충청권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토중심점과 서울과의 거리를 분석
- 제외대상 : 국토중심에서 원거리 지역과 서울의 통근·통학권

② 개발가능성

- 표고, 경사도, 재해발생빈도, 토지이용상태 등을 토대로 개발가능지를 분석

《 개발가능성 분석 지표 》

지 표	내 용
표고	• 도시기반시설 설치 용이성 및 가능성 • 지형훼손 및 절성토사면 발생 정도
경사도	
재해	• 홍수, 지진의 발생빈도
토지이용상태	• 전답, 임야, 식생 등

○ 제외대상

- 댜상류지역,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 관련법에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
- 연담화가 우려되는 기존 시가지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지역
-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군사완충지역), 이전이 곤란한 중요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

③ 보전필요성

-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 가치를 분석
- 제외대상 : 생태적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보전필요성 분석 지표 》

지 표	내 용	요 소
생태적 안정성	경관이 좋고 생태계 연결을 위해 중요한 곳	• 생물종 다양성 및 경관 연속성 • 하천 및 식생경계로부터 거리 • 식생층위 구조
생물 서식환경	동식물의 주요 서식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	• 지형적 요소 • 일사량 및 지표면의 열방출량
생태계 순환성	생태계 구성요소간의 교류가 활발한 곳	• 식생의 활력 • 물의 유출량 • 토양의 배수능력 및 유효토심

4. 후보지 평가기준

(1) 평가항목

□ 대안검토

- 평가항목을 단일위계로 구성하는 방안과 복수의 위계로 구성하는 방안을 비교·검토
 - (제1안) 단일위계로 평가항목을 단순하게 구성하는 방안
 - (제2안) 기본항목, 세부항목 등의 다중 위계로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방안

《 평가항목의 구성방안 비교 》

구 분	제1안	제2안
항목구성	평가항목의 위계 구분없이 설정하는 방안	기본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등으로 세분하는 방안
장 점	· 평가작업이 간단명료	· 일반적인 평가항목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평가항목으로 구분 가능
단 점	· 상이한 위계의 항목이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되는 오류 발생 우려	· 위계별 평가항목의 분류가 어려움

- 평가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목간에 위계를 두는 제2안으로 구성하되 평가작업이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단계 위계로 설정

- (1단계 위계) 일반국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
- (2단계 위계) 기본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전문적인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

□ 대안검토에 따라 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

- 기본평가항목은 수도 및 신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
 - 일반국민 설문조사('03.10.8~10.9) 결과, 전국 순회공청회('03.11.27~12.19) 및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5개의 기본평가항목을 설정

※ 국민 설문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거주지별 인구비례로 2,0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실시(신뢰도 95±2.19%)

《 기본평가항목의 요건과 내용 》

요건	항 목	내 용
수도로서의 기준	국가균형발전효과	국가균형 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국내외 어디서나 빠른 시간내 도달할 수 있는가
도시로서의 기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는가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	도시개발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추진이 용이한가

○ 세부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부요건으로 구성

- 전문가 설문조사('03.10.7~10.31)에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제외

※ 자문위원,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8명을 대상으로 세부항목 36개를 제시하여 중요도를 설문조사

- 자문위, 공개세미나, 전국 순회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변별력, 항목의 중복성, 자료취득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는 항목은 제외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항목》

제외 사유	제외된 항목
전문가 조사 결과 중요도가 낮은 항목	역사문화성, 기후적합성, 관광자원
지표 측정 및 조사의 어려움	녹지축의 연계, 대체에너지 활용가능성, 지하 시설물 구축용이성, 토지소유자의 수, 지진발생 가능성, 대체에너지 활용가능성
항목 타당성 부족 및 타 항목과의 중복	대체수자원, 수량, 원수수질, 항만접근성, 농업 진흥구역, 국토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장래확장 가능성, 비행항로근접성, 기타 지방공항과의 거리, 국토중심성, 배수여건
타 세부평가항목 및 지표로 통합된 항목	접근균등성, 복사면 면적, 상수원 영향

⇒ 세부평가항목을 20개 항목으로 설정

《 세부평가항목의 구성 》

기본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국가균형발전효과 (5개 항목)	경제·산업분산효과, 인구분산효과, 수도권 연담화 방지효과,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 효과, 국민통합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3개 항목)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공항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3개 항목)	생태계 보전, 수질 영향, 대기질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5개 항목)	지형의 안전성, 경관, 배산임수, 자연환경 의 양호성, 도시유지관리의 효율성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 (4개 항목)	토지매입비용, 기개발지,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 사업추진의 용이성

(2) 항목별 가중치

□ 기본평가항목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세부평가항목은 전문가 견해를 반영하여 설정(가중치 설정방법에 대하여 '03.11.21 충청권 3개 시·도와 합의)

○ 기본평가항목 : 2차례 실시한 국민설문조사(1차:'03.10.29~30, 2차:'03.12.20~21) 결과를 평균

※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거주지별 인구비례로 무작위 표본추출한 2,000명에게 설문(신뢰도 95±2.19%)

○ 세부평가항목 : 전문가 설문조사('03.12.22~'04.1.15) 결과를 반영

※ 국토·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제 등 기본평가항목 분야별 전문가 (분야별로 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설문

《 평가항목의 가중치 》

(단위 : %)

기본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 목	가중치	항 목	가중치
1. 국가균형발전효과	35.95	1-1 인구분산효과	9.83
		1-2 국민통합효과	7.05
		1-3 경제·산업분산효과	6.74
		1-4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 효과	6.18
		1-5 수도권 연담화 방지효과	6.15
2.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24.01	2-1 도로 접근성	11.08
		2-2 철도 접근성	8.05
		2-3 공항 접근성	4.88
3.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19.84	3-1 생태계 보전	9.25
		3-2 수질영향	5.74
		3-3 대기질영향	4.85
4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10.20	4-1 지형의 안전성	2.82
		4-2 도시유지관리의 효율성	2.56
		4-3 자연환경의 양호성	2.20
		4-4 경관	1.50
		4-5 배산임수	1.12
5.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10.00	5-1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	2.86
		5-2 사업추진의 용이성	2.74
		5-3 토지매입비용	2.64
		5-4 기개발지	1.76